

## 대 전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5가단228147 약정금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E  
담당변호사 F

변 론 종 결 2017. 6. 22.

판 결 선 고 2017. 9.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519,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26.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들과 H은 망인의 딸들로서(이하 원고들과 H을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신동 ○○ 대 1094㎡ 중 598/1094 지분과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및 부속건물(이하 위 토지 지분과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4.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5.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015.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5. 10. 1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협의취득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총 346,076,6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치번호 있는 경우 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으로 총 346,076,66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86,519,165원( $346,076,660원 \times 1/4$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예비적 주장

가) 설령, 원고들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등과 피고가 향후 피고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보상금은 총 346,076,660원인바, 이는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공통의 착오에 빠진 경우이다.

나) 따라서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원고들 등과 피고가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위 보상금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86,519,165원( $346,076,660원 \times 1/4$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2) 피고가 예상보다 많은 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장래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수 없고,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착오에 빠져 보충적 해석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판단

###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H의 각 증언(다만 증인 H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본인신문결과(다만 원고들의 본인신문결과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H의 진술서)의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원고들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그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 등과 피고는 2012. 5. 30.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되, 피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할 금액(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총 9,000만 원(원고들 등에게 각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할 보상금이 많아야 2억 원일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 등은 피고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이 약 2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4) 이에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최종적으로 총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만 원고들 등 중 H은 당시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 명의에서 빠지기로 하였다).

####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등과 피고가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 보상금 중 원고들 등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H의 진술서)의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원고들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를 그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을 최종적으로 총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1) 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을 애초에 총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가 향후 수령할 보상금이 약 2억 원이라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약정금을 최종적으로 총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약정금을 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향후 수령할 보상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은 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기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1 판결 등도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 등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으로 총 346,076,660원을 수령하였을 것을 알았다면, 이 사

건 약정금을 애초에 정한 바와 같이 총 9,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약정금을 총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5,000만 원으로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들 등과 피고 모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할 보상금 액수가 약 2억 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이 3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나올 것을 알았다면 원고들 등에게 원래 약정했던 바와 같이 총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약정금을 총 9,000만 원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④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고려함이 마땅한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 또는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을 보충적으로 해석한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9,000만 원  $\times$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민